

# 조국 검증 '이념' → '가족' 극한 대립

### 與 “보지못한 광기에 참담” vs 野 “청문회 자격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념'에서 '가족'으로 중심이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극한 대립으로 치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법무행정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자”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지명 직후,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유죄 판결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사노맹 산하의 남한 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활동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활동했던 사과원을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한국당은 사노맹 활동에 대해 “국가 전복을 꾀한 사범”이라고 비판했

다.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바른미래당은 색깔론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조 후보자의 인식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묵은 색깔론'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오히려 조 후보자의 사노맹 경력과 관련해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 당시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한 양심 있는 지식인으로 평가하면서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교수 복직 때 다시 불거진 풀리페서 논란 등에 대한 검증보다 이념 논쟁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족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세 초점이 바뀌었다.

한국당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 이사진을 지낸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기술신용보증과의 구상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공동학원의 무변론 대응, 사모펀드 등의 의혹들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사기 혐의와 부도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부산에 위치한 조 후보자 부친의 묘소를 찾아 비석에 새겨진 동생 부부 이름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체 모금액의 80.8%(10억5000만원)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라고 의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은 국민의 공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히 의혹을 받고 있다. 고교 시절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 의전원 당시 유급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점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씨와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논문의 경우, 해당 대학 내부 시스템에는 박사로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학은 조 후보자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기록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의혹에 대해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수사할

격 배경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라면 임시 부정 파문은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정의와 개혁을 외치며 특권층 공경했지만 정작 자신은 온갖 특권과 특권 누리며 살아왔다”며 “(딸은) 부모가 쌓아준 스펙으로 대학을 가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 장학금까지 가로챘다. 조 후보자 본인이 비난하던 특권세습이 아니고 뭐겠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면 전환과 사법개혁 좌초를 위해 조 후보자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족신상탈기도 모자라 선천 묘비까지 티는 일이 있었다. 폐륜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제껏 보지못한 광기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막아서는 의도는 문제인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겠다는 의도이며 한일 경제전 와중 쏟아진 국민 비판을 지워버리고 문재인정부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이해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한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R&D 에타면제가 통과됐다”며, “R&D 개발해나가는 종합대

## 심상정 “조국에 2030은 상실감, 4050은 박탈감, 6070은 진보 혐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제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작업을 해나갈 것

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그 검증결과에 기초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며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심 대표는 “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십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나 아내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진영논리에 휘둘러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제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오신환, 추석 전 손학규 ‘사퇴’ 요구

### “당헌·당규상 탄핵 어려워...전대·비대위 가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에게 추석 전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 이후 당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조기 전당대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보수대통합론에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의 개인적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하는 등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자강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손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당헌·당규상 탄핵과 같이 손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며 “오늘 호소한 비와 같이 손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내 호남 중진 의원까지도 지금 같은 상태로 (내년 총선) 어렵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추석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손 대표 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 체제 이후 당 운영 방식에 대해 “조기 전당대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 의견이 모이면 다시 한번 손 대표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 대표가 추석 전까지 10%대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자신사퇴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인

으로서 본인의 발언에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런저런 발언 과정에서 그것을 번복하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당 대표로서, 공인으로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론과 관련, “당장 두 분이 나서서 당을 이끌라는 것이 대다수의 목소리는 아니다”며 “우리가 창당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현하는 게 내년 총선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두 분이 전면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창당 정신을 구현할지는 당사와 및 당 구성원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꺼내 든 보수대통합론에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의 희망사항으로 바른미래당 누구와 의논을 했거나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스스로 자강하고 화합하고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선거법 관련) 정계특위 표결은 동의하지 않는다. 최대한 합의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표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한국당은 입장 전환 없이 무조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저는 한달이라도 정계특위를 연장하고 한국당이 입장을 정해 협의체 구성에 전향적으로 나오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가피하게 표결을 강행해야 한다면 다음 달 1일에 특위를 연장하면서 당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